

## 다산포럼

## 토빈세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

임현진  
서울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투자인가 투기인가? 최근 새 정부의 각료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보면 훈돈스럽다. 이른바 '재택'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 보다 투기에 손들어 주어야 할 것 같다. 국제금융거래는 어떨까. 우리의 경우 론스타 사태에서 보았듯이, 합법을 통한 주식 투자를 통해 경영권 장악은 물론 막대한 차익을 가져가는 투기성 국제금융자본의 폐해를 겪은 바 있다.

여기서 국제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국가들 사이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제안한 '토빈세'다. 본래 토빈이 제안한 세제 비율은 금융거래액의 1%였지만, 이후 그 비율이 0.1%와 0.25% 사이로 계속 줄어들었다.

이 주장은 거의 20여 년 동안 수면 아래 있

다가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 후 토빈세는 오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2011년 전세계적으로 벤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이후 국제투기자본의 부당한 거래와 수익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흥미롭게도 올해 1월 유럽연합(EU) 11개국이 '토빈세'라 할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앞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절차상 각 나라의 의회는 물론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실현된다면 상업은행을 포함하는 투자은행, 보험회사, 연기금펀드, 주식브로커,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11개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의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과 채권거래는 0.1%, 파생상품거래는 0.01%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매해 11개국 세수의 1%에 달하는 300억 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금융거래 감소로 인해 세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1980년대 토빈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경험은 채권이나 선물거래의 감소로 인해 세수를 줄여든 결과 1991년 세율을 절반으로 줄이다가 폐지하기에 이르렀

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아가 조세회피를 위해 미국이나 아시아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EU의 재정상황은 오히려 악화될 우려도 있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과 세연합'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1997년 12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주간이었던 이나시오 라모네(I. Ramonet)는 "시장을 무장해제하라!"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토빈세 채택을 압박하기 위한 시민운동단체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 사설이 기록제가 되어 1998년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ATTAC이라는 시민교육계몽운동단체가 출범하였다. 처음부터 ATTAC은 토빈세 도입이라는 분명한 대안을 갖춘 시민계몽운동조직의 성격을 지녔다.

ATTAC의 최우선 목표는 전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기세력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며, 나아가 변혁스러운 금융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빈세를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규범적 차원에서 대안제시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적용 사이의 거리가 매우 크다.

국제투기자본은 통제할 필요는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일본의 포함한 일부 선진국들의 무제한적 양적완화로 인해 우리의 경우

자본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통해 국제자본의 투기성 이동을 제어할 정책적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활동이 2000년대 들어 시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주로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다 보니 공론화가 어려웠다.

국제적 투기자본이 국민경제의 작동을 위해 나쁘다는 사실은 규범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ATTAC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개방대학' 개설 및 '내안마을' 체험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국제투기자본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대중계몽교육 운동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시민사회에 대응전략도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대안모색과 위로부터의 일방적 전파방식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로부터 추진하는 각종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와 함께 결여로 운동력은 자라나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모색 운동을 풀뿌리 수준으로 내려가서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부나 기업의 주장과 대안에 늘 뒤쳐지고 말 것이다.

나 안전대책은 사설상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의 재난관리 역시 극히 허술하다. 국가 차원의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 및 발생 후 신속한 후속 대책 등을 위한 종합재난방제센터 설립은 거론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보니 재난 및 화재물질 관리체계가 환경부와 차지단체, 소방서 등으로 3원화돼 안전관리 사고가 날 경우 관계 당국이 따로 노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화학공장 사고는 이처럼 터졌다 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기 쉽상이다. 더욱이 화학공장을 중 상당 수가 민간주택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공장 종사자들은 물론 시민들도 환경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여수산단은 위험물 사용량과 제조 공장이 전국 산단 중 많고, 1970년대에 공장들이 입주하면서 대부분 노후화된 상태다. 이번 사고 역시 공장이 낡아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불렀다. 그런데도 회사들의 안전의식이

## 해난사고 급증, 노후·소형 어선 교체해야

전남지역 대부분의 어선이 소형인데다 노후돼 각종 해난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는 풍부한 어족지원을 공급해주는 어민들의 생활터

전이지만 불시의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어선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남도에 따르면 총 3만1824척의 전남 어선 가운데 91%인 2만8998척이 5t 미만의 소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t 미만의 소형 어선도 1만831척으로 34%에 달한다고 한다.

또, 선령(船齡)으로 따질 경우 16년 이상 된 노후 어선이 1만2166척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는 등 10척 가운데 4척이 노후 어선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선령이 낮은 5년 미만 어선은 5454척으로 17.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징적인 것이 인사정책이라는 점에서 호남 출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빅4 기관장에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다시는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서 정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반복되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래를 향해 국운을 걸고 나아가야 할 시대에 권위주의 시대의 인물이 또다시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

전남도가 급증하는 어선 사고에 대비해 특별예방에 나섰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형어선 안전 운항을 위해 구명동의 확보, 어선 위치자동발신장치(AIS), 초단파발신기(VHF) 등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어민들의 영세성을 감안해 노후 어선과 소형 어선에 대한 교체비 지원 등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침몰, 화재 등 각종 해난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전남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08년 47건

## 無等鼓

"당신은 왜 (그토록 위험한) 산에 오르는가"라는 질문에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른다(Because it is there)"고 답한 영국 등반가 조지 말로니.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 올림픽위원회가 자신에게 메달을 수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서 "등반에서는 싸우는 상대도 없고 심판도 있을 수 없다. 단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뿐이다"고 밝힌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

말로니와 메스너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 철학적인 답변은 혹독한 추위와 위험 등 극한(極限)의 조건에 맞서 힘을 다해온 고봉에 오르고자 하는 산악인들의 도전정신과 용기와 대변한다. 실제 말로니는 에드먼드 헐리리 최초 등정보다 29년이나 앞선

1924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초등을 시도했고, 메스너는 1970년 당시에 이온 8번째 도전이다. 원정대는 오는 4월 20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막을 정상에서 휴날릴 예정이다.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김홍빈 대장과 원정대의 성공적인 등정을 기원한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 NGO 칼럼

김범태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오로지 야당의 양보만을 기대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순탄한 국정수행이 어렵다.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가장 먼저 내각의 책임자인 국무총리를 인선해야 하지만 청문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를 했는가 하면, 이미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인사를 충전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 누가 보더라도 부적격자인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만을 관찰하려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듯 치더라도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인사를 충전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최소한의 양보를 통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위기 국면과 국민의 정서에 기대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박대통령에 덫걸친 불통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뒤틀려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대통합의 정치를 역설하면서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호남 출신의 전직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였으나 호남 출신에 대한 장·차관 임명은 가물에 콩나듯이 했다.

물론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니 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적인 것이 인사정책이라는 점에서 호남 출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빅4 기관장에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다시는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서 정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반복되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래를 향해 국운을 걸고 나아가야 할 시대에 권위주의 시대의 인물이 또다시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

전남도가 급증하는 어선 사고에 대비해 특별예방에 나섰다고는 하나 그것만

으로는 부족하다. 소형어선 안전 운항을 위해 구명동의 확보, 어선 위치자동발신장치(AIS), 초단파발신기(VHF) 등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어민들의 영세성을 감안해 노후 어선과 소형 어선에 대한 교체비 지원 등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침몰, 화재 등 각종 해난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전남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08년 47건

## 기고

## 식목일, 이젠 어부림(漁付林)을 가꾸자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면서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갯벌을 대책으로 2002년부터 바다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갯벌을 발달시킨 바다 숲 조성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부림(漁付林)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부림이란 해안, 하천, 호수 등 수면에 숲이 투영해 양분의 공급과 오염을 방지해 어류의 서식과 번식을 도와주기 위한 산림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선뜻 숲이 고기를 모은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조상들은 예부터 숲의 그늘에서 고기가 모여드는 습성을 이용해 바닷가에 숲을 조성하였고, 이를 잘 보호하여 어획량을 늘리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숲에 의해 바닷가에 그늘이 드리우면 도미나 멸치가 해안에 붙어 번식을 잘하고 고기가 잘 집된다. 자연과 공생하면서 사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실로 뛰어난 대목이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고 있는 갯벌 현상으로 어류 산란 성육장 등이 사라지

면서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어부림 2000

여 그루가 1959년에 천연기념물 150호로 지정되어 있음을 아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어부림이 어군효과뿐만 아니라 태풍 등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사적인 유물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숲은 빗물을 저장하는 녹색 맵의 역할을 한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서 다양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순환시키는 토양미생물에게 삶의 터전이 되고 계곡의 수질을 정화하여 맑은 물을 제공하고, 모든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숲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덤이다.

일본에서는 관련단체들이 해변에 나무심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의 '진주의 숲', 야마구치현의 '불고기의 숲' 같은 단체들이 곳곳에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홋카이도에는 '불고기 보안림'이라고 하여 대규모 숲이 물가에 조성되어 있다. 무조건 아무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물고기가 언제 어떤 숲 그림자를 좋아하는지를 밝힐 때

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을 제68회 식목일에 앞서 담아보았다.

개 연구하여 수종을 결정한다. 어종과 숲의 관계를 연구하는 투자도 계획하지 않는다.

식목일엔 바다로 가자!

바닷가 숲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경관이다.

여름철 뜨거운 해변 속의 숲 그들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낭만적이지 아니한가?

올해 식목일엔 삼과 묘목을 들고 산만 찾지 말 일이다. 모두들 바다로 가자. 숲은 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해양수산부가 5

년 만에 다시 탄생하였다. 해양수산부가 50%에 유통하고 있는 전남도 입장에서 보면 새삼 반가운 일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도민의 특색을 살린 어부림 조성으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곳, 물고기가 자유롭게 면바다와 가까운 연안으로 자유롭

게 왕래할 수 있는 곳, 물이 맑고 녹색물결이 넘치는 곳, 바다와 숲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을 제68회 식목일에 앞서 담아보았다.

▲이영희·광주시 서